목어

정의 그리고 자유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군사작전 명칭을 '무한정의' 에서 '항구적 자유' 로 바꾸었다 한다. 일부 이슬람 학자들의 '무한정의란 알라신만이 구현할 수 있다' 는 주장에 '그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가 명칭 변경 이유다.

피 터지게 싸우게 되는 전쟁에 명칭이 무슨 영향을 주겠냐만 그나마 '정의' 란 단어를 비켜 간 것이 약간은 다행스러워 보인다.

인도신화에서 아수라는 원래 선한 신으로 정의(正義)를 위해 싸웠다. 그래서 '정의의 신' 으로 불리기도 했다. 그런데 그 정의에 너무 집착한 탓인지 아니면 정의를 구실로만 삼았던 탓인지 그가 만든 세상은 그만 '아수라장' 이 되고 말았다. 결국 선한 신의 세계에 편입되지 못하고 추방되어 마신(魔神)쪽으로 분류되고 만다. 불교에서는 그 아수라의 경지를 육도 가운데 인간의 바로 아래 서열로 만들어 놓았다. 그나마 지옥, 아귀, 축생보다 한 단계 높아 인간에게 보다 가깝다. '정의' 에 대한 지나친 집착만 버린다면 아수라도 인간 반열에 들 수 있는 것이다.

'평화' 역시 마찬가지다. 체코의 하벨 대통령 말을 빌리면 이렇다.

'평화라는 말은 평화를 방어한다는 구실 아래 사실상 무력을 의미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단어들, 평화 정의 등도 그 말을 쓰는 사람, 또는 그 집단, 사회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 이처럼 양면성을 띄게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항구적 자유' 의 그 '자유' 는 어떤가.

불교에서의 자유는 탐 진 치 삼독의 지배를 받고있는 가당찮은 자아(自我)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근,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자유' 의 의미와는 글쎄, 그 맛이 좀 다르지 않은가.

'항구적 자유' 를 위한 전쟁이 혹, 강자들의 자유공간만을 확대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기를 부처님께 기도 드린다.

김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오해서 빚어진 억지…종교갈등 우려"

'개신교 관람료 반대' 무엇이 문제

개신교계가 9월 21일 '국립공원 사찰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반대협의회(이하 '관람료 반대협)' 을 구성하고 앞으로 사찰 관람료 반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한 것에 대해 조계종 등 불교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개신교계의 주장이 ' 오해에서 빚어진 억지' 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경내지는 사유재산 – 문화재 보존지역"

"징수 타당성 모른채 외형만 봐

사찰문화재관람료 반대협 실무간사 이승우목사는 "기존 69개 사찰이 관람료를 징수받는 것은 문화재 보호법 위반이고 전통사찰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람료를 받아 사용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다"는 주장을 펴는 등 개신교계는 사찰 관람료를 받는 것이 부당하며 불교계에 주는 특혜라는 오해를 하고 있다.

사찰문화재가 국립공원 안에 있다는 이유로 예외 없이 산 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사찰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다는 개신교측의 주장에 대해 조계종 환경위원회 위원인 이병인교수(밀양대)는 "개신교계의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을 모른 채 외형만 본데서 나온 오해다"며 "원래부터 문화재 관람료는 국립공원 입장료와는 별개의 것이고 공원입장료가 나중에 징수되면서 통합된 것이다" 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사찰 경내지를 공유지로 생각하고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특혜로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더구나 문화재관람료의 총 수입은 문화재 보수에 드는 비용의 50%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보호법 제39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행정지침' 과 '3자간 합의' 에 의해 관람료를 받고 있으므로 관람료 징수는 부당행위이고 법적근거가 없다는 개신교계의 주장에 대해 배금자 변호사는 "사찰경내지를 담장이 처진 곳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경내지를 사찰담장 안으로만 생각하고 있기에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경내지는 분명히 사유재산이며 문화재보존지역이다"고 말했다. 또 배변호사는 "현재 참여연대가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신교계는 9월 21일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립공원 사찰문화재 관람료 부당징수반대협의회' 를 결성했다.(사진제공=불교 정보센터)

징수의 주체가 국가이어야 한다는 개신교계의 주장은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 보유자 관리단체가 받아야 한다' 는 문화재보호법을 오히려 위반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폐지하고 문화재 유지보수비를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조계종의 입장임에도 개신교계는 조계종이 입장료와 관람료 징수를 원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재 관람료를 사찰의 수입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개신교계의 주장은 전반적인 사실파악이 미약한 가운데 대안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조계종이 재판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개신교계의 이번 행동이 정당한 의도를 가진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개신교계가 국립공원 사찰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반대협의회까지 결성해 관람료반대운동에 나선 것에 대해 다른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가 현재 항소중인 상황에서 개신교계가 정확한 사정도 모르면서 종교 갈등을 유발시킬 소지를 안고 있는 미묘한 사안을 끄집어 낸것은 현재 개신교계가 추진 중인 '교회재산관리법' 을 관철시키기 위해 문화재관람료문제를 끌어들인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참여연대가 지난해 5월 천은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문화재관람료) 반환청구소송에서 서울지법은 지난 2월 2일 "사찰관람료는 부당이득금이 아니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조계종은 사찰의 범위는 경내지 까지 포함된 것이며 따라서 입장객의 주관적 의사와 상관없이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사찰을 관람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승가교육체계 기틀 다졌다"

조계종 행자교육원 10년

9월26일 직지사에서 회향한 조계종 제20기 행자교육원은 91년 행자교육원이 처음 시작된 이래 꼭 10년째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의미가 깊다. 특히 10년의 성과 못지않게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행자교육원이 이룬 가장 큰 성과는 무엇보다도 무질서하게 진행돼왔던 행자교육의 틀을 바로 잡고, 승가교육 체계의 기틀을 다진데 있다. 지금까지 남행자 2500여명, 여행자 2200여명 등 모두 4700여명의 행자를 배출, 승가의 질을 높이고 승가위계를 확립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또한 승가의 기초 · 기본교육과 전문교육 및 재교육의 디딤돌 역할을 함으로써 95년 교육원이 출범하면서 종단 승가교육 개혁 작업을 이끄는데 버팀목이 됐다. 이달말 시행되는 3급 승가고시의 대상자들이 바로 91년 제1기 행자교육원을 수료했던 승랍 10년째 되는 스님들이라는 점에서, 3급 승가고시 또한 행자교육원의 결실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교육원은 아직도 많은 숙제를 남겨놓고 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과제는 상설 행자교육원 설치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상설 교육장을 마련하지 못함으로써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육내용도 습의 교육과 예식 위주로 이루어지는 등 형식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교수진의 안정적인 교과연구와 다양한 교과과정 설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지적받아 왔다.

상설교육원 설치

교육과정 조정 '과제'

행자교육의 체계 및 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과제다. 현재 행자교육은 입산사찰에서 5개월 교육 및 수행을 마치고 행자교육원에서 3주간 교육을 받는 것으로, 6개월 기간으로 짜여 있다. 그러나 입산사찰이나 본사의 소집교육은 형식에 그치고 있으며, 3주간의 행자교육원 교육도 너무 짧아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교육원 관계자뿐만 아니라 교계 전문가들은 행자교육 체계와 기간을 출가사찰 및 본사에서 6개월, 행자교육원에서 6개월로 하는 등 교육기간을 1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밖에 계율과 기본습의와 예식 위주의 현재 교과목도 재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불교의 기초교학이나 수행과 관련한 교과편성이 내실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교재개선 및 편찬도 필수적이다.

또한 행자교육원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사와 습의사의 전문성 및 연구력 확보도 시급하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범어사 주지선출 언제쯤

원로 – 소임스님간 입장차 여전

성오 스님 사표제출 안해

"늦어도 11월 중순 마무리"

범어사의 차기 주지 선출이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24일 범어사 운영위원회와 종무협의회는 연석회의를 열고 산중 현안에 대한 돌파구 모색에 들어갔다.

당초 20일에 열리기로 했던 문중총회가 유회되면서 후보단일화를 통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기대됐던 차기 주지 선출 건이 또 다시 늦춰지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 이후 범어사는 실추된 명예 회복보다는 차기 주지직 다툼의 양상을 보이며 공방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재보수 국고보조금 횡령사건으로 구성되었던 종무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임시집행부가 사표를 제출하는 등 종무를 정상화 하자는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종무위원장 흥교 스님은 "늦어도 10월 10일까지는 문중총회나 산중총회 일자를 확정하겠다"며 "그동안 대화의 창구가 없었던 원로스님들과도 대화를 통해 단시일 내에 현안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흥교 스님의 말대로라면 늦어도 11월 중순경에는 범어사 차기 주지 선출이 마무리 된다는 수순이다.

이 같은 결정은 원로 스님과 현 집행부간의 갈등처럼 표출돼 온 범어사내 문제를 화합과 대화로 풀어보려는 노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범어사의 위계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어른의 뜻에 따라야 한다' 고 주장해온 원로스님 측과 '종헌 종법상의 절차' 를 강조해온 현 집행부간의 입장차를 줄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있다.

원로스님들이 주지로 지목한 대성 스님과 현 임시 집행부 부주지인 영환 스님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성오 스님은 총무원에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주지사퇴의사를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만큼 차기 주지 선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범어사는 화합 승가의 본연으로 돌아가 차기 주지선출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기 전에 차기 주지 선출을 마무리해 선찰대본산의 위상을 되찾는 일만을 남겨놓고 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訃告

梵魚寺 禪德 碧坡大禪師

九月 二六日(陰 八月 十日) 午後 九時 三十分

於梵魚寺 休休精舍 入寂 玆以訃告

■永訣日時 : 불기 2545년 9월 29일(陰 8월 13일) 오전 10시

■永訣式場 : 梵魚寺 普濟樓

■茶 毘 場 : 梵魚寺 茶毘場

禪德 碧坡堂 東州 大禪師 門徒葬 葬儀委員長

證 明 : 혜암 서옹 서암 월하 고산 녹원 능가 대정 덕명 도원 도원 도천 동춘 법전 보성 석주 성수 숭산 우룡 원담 원명 이두 정관 정천 종산 지관 지백 지유 지종 지혜 진제 천운 청화 화엄 활안

顧 問 : 정대 백운 무진장 양익 지원 월주 월성 혜정 법흥 법정 선용 창도 초우 설조 성파 향운 오현 도영 일원 월탄

葬儀委員長 : 흥교

葬儀副委員長 : 성현 선래 여현 몽산 혜관 덕민 무비 조연

護 喪 : 지하

葬 儀 委 員 : 각명 각우 거해 경륜 경선 경암 계성 계전 고우 공마 관조 광진 광탄 근일 금정 금종 기현 길상 능허 다정 담연 대각 대성 덕륜·덕수 도광 도권 도근 도민 도배 도법 도봉 도성 도업 도우 도원 도현 도현 도형 도형 도후 동광 마근 만성 만송 명선 명원 명정 무공 무근 무설 무여 무착 밀운 반월 방두 백련 범일 법등 법륜 법성 법성 법의 법장 법조 법진 법타 법현 법회 보광 보광 보선 보암 보일 봉주 상우 상경 상운 상현 선과 선재 선효 설정 설파 성곤 성덕 성우 성우 성주 성조 성타 세민 수진 승원 양국 양산 여환 영규 영진 영환 오본 용학 우담 우송 원감 원경 원두 원명 원산 원순 원우 원웅 원정 원정 원칙 원타 원택 원형 월탄 월파 유정 의룡 인각 인걸 일면 일미 일수 일오 일출 일호 자용 자우 장산 장선 적명 정각 정광 정락 정련 정명 정암 정진 정찬 조연 종걸 종고 종산 종선 종학 종환 종훈 중원 지명 지상 지선 지안 지욱 지운 지원 지원 지정 지해 지환 지흥 진관 진명 진월 진허 천제 철우 청강 춘광 통광 평상 항명 한탑 해공 향국 현고 현기 현묵 현문 현봉 현산 현전 현지 현진 현해 현호 혜관 혜광 혜국 혜권 혜남 혜능 혜산 혜성 혜운 혜원 혜일 혜총 호연 홍선 홍원 화남 화랑 효경 효림 효원 휴정 경륜 계효 광조 근일 대원 도각 도공 도문 도완 도후 동욱 명진 몽산 무이 범종 법등 법보 법성 법안 본각 석호 설송 성각 성관 성광 성오 세영 수완 수현 여연 영담 영배 영조 운담 원담 원명 원우 원타 원행 월우 유광 인묵 일법 자승 장곡 장운 장적 장주 정념 정우 정인 정휴 종림 종삼 종상 종하 지광 지광 지욱 지운 지하 지현 지형 지홍 진각 진만 진원 청화 탄우 태공 태봉 학담 향적 현각 현응 혜정 혜주 혜창 화범 류진주 송석구 강선태 박수관 백대일심 김영웅 범어사신도회 금강암신도회 여여선원신도회

執行委員長 : 성오

都 監 : 지연 범산 석공

知 賓 : 정야 지종 도관

侍 者 : 석산 외 강원대중

恩 上 佐 : 정여 정현 정암 정묵 정허 정목 정일 정오 상현 상래 상범 정근 상우

法 上 佐 : 정만 정범

孫 上 佐 : 도경 도림 도성 도곤 도산 도웅 도일 도연 도명 도우 효산 효경 원성

■문의 및 연락처 : ☎(051)508-3122~7, 508-2636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번지 범어사

禪刹大本山 金井山 梵魚寺

禪德 碧坡堂 東州 大禪師 門徒葬 葬儀委員會